

‘차보다 사람’… 차량속도 저감, 횡단보도 충돌 감소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3년 성과

서울 36곳 사업완료, 6곳 진행중
송파 이어 노원 > 구로 > 성동 順

서울시가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완료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용산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실시한 지역 중 용산구의 만족도는 5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 시행 전후 만족도 차이 역시 용산구가 2.8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도로다이어트란 도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로의 전체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차로 폭과 수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거나 대중교통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환경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36곳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6곳에서 진행



구로구 도로다이어트 사업 시행 후 모습. /서울시

중이다.

그동안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이 확대되고 도로 이용 효율이 높아졌다고 시는 전했다. 보행공간은 서울광장(6449m²)의 6.4배 만큼 넓어졌고, 사업을 마친 성동구 성수이로 7길은 차량 평균 속도가 17.9km/h에서 18.5km/h로 증가했다.

시가 올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2017년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행환경 만족도가 높아졌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5곳을

선정해 지역 주민과 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만족도를 평가했다. 조사 대상자는 노원구 초안산로, 용산구 이태원로, 송파구 양산로 2길, 구로구 경인로 53길, 성동구 뚝섬로 3길 등 총 5곳이었다.

조사 결과 송파구의 만족도가 89.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원구(88.6점), 구로구(83.2점), 성동구(77.6점), 용산구(57.5점) 순이었다. 사업 전후 만족도 차이는 송파구가 48.5점으로 1위였고, 노원구(41.5점), 구로구(36.8점), 성동구(33.9점), 용산구(2.8점)가 뒤를 이었다.

송파구 양산로 2길은 차도 폭과 함께 차로 수를 줄이는 도로다이어트를 실시했다.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축소하고 차로 폭을 8m에서 3~5m로 줄였다. 보도 폭은 2m에서 3~4m로 넓혔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교차로의 회전반경을 줄여 보행 안전성도 높였다.

용산구 이태원로는 차로 수는 그대로 두고 차로 폭만 조절했다. 노상주차장을 없애 차로 폭을 기존 15.3m에서 13.5m로 줄였다. 보도 폭은 5m에서 6.3m로 확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보행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재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송파구의 경우 차량 속도 저감,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충돌 위험 감소, 교통약자 안전성 향상 등 전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며 “용산구는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시설물이나 설계 요소가 반영되지 않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개선이 없는 등 시설물 정비가 미비해 보행자 인식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운전자의 주행태 변화도 살펴봤다. 해당 설문에

서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는 ‘도로다이어트 사업 전보다 천천히 운전하게 됐다’고 응답한 반면, 용산구와 성동구는 긍정적인 비율이 낮았다.

허 연구원은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공간이 줄었지만 용산구 외에는 도로 이용에 큰 불편함 없었다. 용산구는 상점이 많은 대상지 특성상 주차 공간이 사라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며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조건 주차 공간을 삭제하기보다는 차도 폭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보행 공간 확보와 함께 포켓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상지 선정 과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도로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보다는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 대상지로 제안되고 선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보다 많은 협의와 의견수렴, 논의과정을 거쳐 도로다이어트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metroseoul.co.kr

서울시, 도시재생 13곳 추가 지정

홍릉·광화문·북촌 가회동 등
도시재생 8곳, 주거재생 5곳

서울시는 신경제거점조성 및 산업·상업·역사문화 중심지 육성을 위한 신규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과 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5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지역 후보지로는 ▲홍릉 일대 ▲광화문 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원 일대 ▲면목동 일대 ▲구의역 일대 ▲홍제 역세권 일대 ▲풍납토성 역세권 일대 등 8곳이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창출거점을 육성하는 경제기반형과 산업·상업·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으로 나뉜다. 홍릉만 경제기반형 후보지다.

이번 후보지 8곳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감도 높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최

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홍릉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연구기관 집적지다. 대학생 12만명, 박사급 약 5000여명, 외국인 유학생 7000여명의 연구 인력이 집중된 지역이다. 시는 도시재생으로 24시간 연구하며 즐길 수 있는 R&D 창의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옛길·옛물길, 육조거리터 등 역사자원과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특화 계획을 수립한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고 서촌, 정동 등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해 광화문광장 활동성이 역사도심 전체로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은 한옥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

역으로는 ▲성동구 사근동 ▲은평구 응암3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구로2동 ▲중랑구 중화2동 등 5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정비 사업 해제 지역을 포함한 저층 주거 밀집지로 주택 노후화 생활시설 부족,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11일 열리는 ‘2025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지역에는 향후 5~6년간 미증 물 사업비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도시재생 네뷸시 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은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해 차근차근 도시재생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바이오스타트업 연구실험동 15일 오픈

서울시는 오는 15일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 바이오스타트업 전용 연구실험동의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실험동은 제약·의료기기 분야 기초 연구를 실험하는 공간과 핵심 연구장비 41종 57점을 구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지상 5층 3216m² 규모로 지어졌다. 연구실과 바이오스타트업 입주 공간(20개) 등을 갖췄다.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시험품제작실. /서울시

이 드는 연구시설을 구축하기 어렵고 고가의 실험장비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실험동은 바이오스타트업이 안정된 연구실험 환경에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연구실험동 3~4층은 입주기업 전용 연구실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1~2층은 개방형 실험 공간으로 만들어 입주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동대문 서울바이오허브에
연구장비 등 57점 구축, 개발지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대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방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오른쪽)과 안중근 의사의 증손자 안도용(왼쪽) 씨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 앤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마스크 불법제조 등 43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 2000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 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체 역시 전문 제조 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